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369회)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8년 11월 일

#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8년 11월 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의 생산성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 다양하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
- 이렇게 정부의 노력이 소홀한 가운데 최근 농업분야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쌀 목표가격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바로 그것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현재 제기되는 농업분야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살기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쌀 목표가격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24만원으로 책정해 줄 것과 PLS 제도 시행은 농약 허용품목 등록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붙임 : 건의안

보낼곳 :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예로부터 농업(農業)은 천하(天下)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根本)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여 농사짓는 농민과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가간 수출입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식탁에는 외국산 수입 농축수산물도 점령하였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은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젊은이들의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급기야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고령의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들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의 생산성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 다양하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노력이 소홀한 가운데 최근 농업분야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쌀 목표가격입니다. 쌀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으로 정부가 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쌀 목표가격을 보면, 정부안은 188,192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된 가격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이는 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은 주식인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현실적인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4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밥 한 공기의 쌀값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3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인 일명 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PLS는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만약 PLS 적용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한 방울이라도 검출되면 그 작물의 출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할 때 살포하는 농약이 만약 부족하여 다른 농약을 살포하거나, 농민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근의 논이나 밭에 살포된 농약이 비의도적으로 유입될 경우 그 농작물은 전량 폐기해야 하는 실정으로 PLS 시행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현재 제기되는 농업분야의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살기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24만원으로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PLS 시행 전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의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많은 품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PLS 제도 시행은 농약 허용품목 등록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1월 2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